

< 제5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 발표내용

◆ 우리 연구원에서는 노동부 고용보험기금의 예산지원을 받아 한국노동경제학회 · 한국사회학회 · 한국인구학회 · 한국조사연구학회와 공동으로 제 5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보도자료는 발표논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 순서

- ‘좋은 일자리(Good job)의 개념구성 및 결정요인의 분석: 방하남 · 이상호
- 기혼여성의 노동공급과 단시간 근로: 황수경
- 이공계 인력의 경제적 지위 및 근래의 변화: 류재우
- 은퇴 결정과 은퇴 전 · 후 소비의 상호작용: 안종범 · 전승훈
- 소득계층별, 종사상지위별 가계부채에 관한 연구: 김학주
- 미취학자녀의 사교육 이용여부 및 비용의 결정요인: 김지경

'좋은 일자리(Good job)'의 개념구성 및 결정요인의 분석

담 당 자	방하남·이상호
전 화	02)783-5173/02)3775-0696
매 수	3 매

- 본 논문은 2002년도에 실시된 한국노동패널 5차년도 조사자료 중 상용직 임금근로자로서 전일제 근무자에 해당하는 2,891명을 추출하여 노동시장에서의 개별 근로자들의 성취를 가늠해 주는 '좋은 일자리'(good job)에 대한 개념화 및 측정, 그 분포와 결정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주 내용으로 함.
 - 이 때 통계적으로 측정가능한 좋은 일자리의 지표를 구성하기 위해 경제적 보상으로서의 임금, 사회적 척도로서의 직업위세, 심리적·주관적 척도로서의 직무만족도를 종합적으로 이용하였음.
 - 이러한 개념정의에 기초하여 모든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에서 '좋은 일자리'에 이르는 4개의 서열범주로 분류한 후 개인들이 상대적으로 보다 좋은 일자리에 속할 확률의 결정요인과 효과를 추정함.
- 기초통계량을 통해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 사업체 특성 및 직무특성에 따라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의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표 1> 독립변수들의 범주에 따른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 분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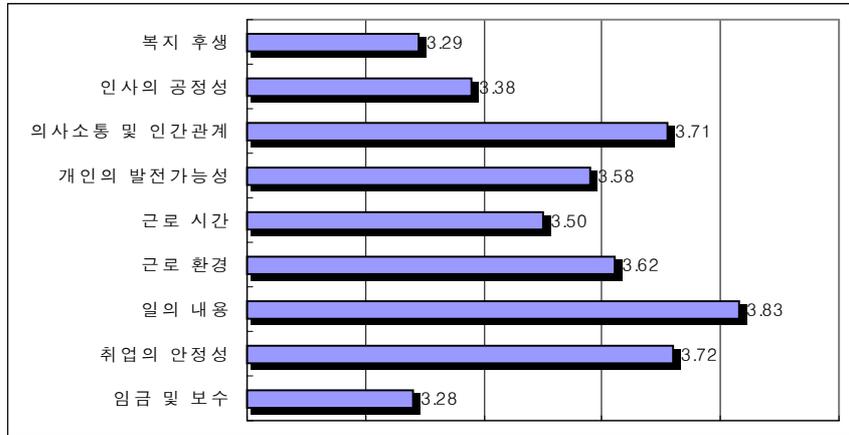
변수명		나쁜 일자리의 비율	좋은 일자리의 비율	
인구학적 특성	성별	여성	18.2	10.9
		남성	12.1	17.5
	연령 (기준범주=30대이하)	30세 미만	11.0	8.8
		30-39세	9.6	16.9
		40-49세	15.6	20.4
		50세 이상	28.6	15.3
	가구주	가구주	12.0	19.1
		가구원	17.0	10.6
	혼인상태	미혼	11.2	7.7
		기혼	15.7	18.1
교육수준 (기준범주=중졸이하)	중졸이하	36.2	1.4	
	고졸	16.2	6.1	
	2년제대졸	6.7	13.0	
	4년제대졸	2.4	37.3	
거주지역	서울	13.2	17.4	
	기타 지역	14.8	14.3	
사업체 특성	공공부문	공공부문	2.6	37.4
		민간부문	16.2	11.6
	노조유무	노조 있음	6.8	26.2
		노조 없음	16.6	11.8
기업규모	대기업(> 1000)	5.3	26.6	
	<=1000)	15.8	13.3	
산업더미 (기준범주 = 제조업)	제조업(농림어업포함)	17.3	8.4	
	전기가스·수도 및 건설업	9.8	14.2	
	도소매 및 수리업	18.3	6.1	
	운수·창고·통신업	13.7	12.7	
	금융 및 보험업	15.6	20.2	
	공공서비스업	7.6	29.2	
직무 특성	직종더미 (기준범주=단순노무직)	전문가	-	66.5
		준전문가	1.4	23.8
		사무직	1.3	10.6
		서비스판매직	18.0	5.7
		기능직	20.4	1.3
		단순 노무직	59.9	0.4
전체		14.4	15.0	

-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 다른 특성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특성별로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을 살펴보면(서열로짓분석),
 -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에 취업해 있을 확률이 낮아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 연령이 증가할수록 좋은 일자리로 취업할 확률이 증가하여 약 50세에서 피크를 이루며
 -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중졸이하에의 학력에 비해 고졸자가 약 1.7배, 전문대졸자는 2.7배, 4년제 대졸자의 경우에는 약 3.8배 정도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근속년수에 따라서는 근속기간이 10년 정도 차이가 날 경우 좋은 일자리로 취업할 확률이 약 2.2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사업체 특성에 따라서는 공공부문 대기업의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이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추정됨.
 - 직종에 따라서는 단순노무직에 비해 준전문직은 83배, 전문직은 694배 정도 좋은 일자리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좋은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에 비해서 일자리 특성항목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직무와 관련된 만족도 점수의 차이를 비교하였음.([그림 1] 참조)
 - 개인이 일자리에 내에서 느끼는 만족도 측면에서 ‘임금 및 보수’의 만족도(3.28점)는 그리 높지 않은 반면
 - ‘일의 내용’이나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취업의 안정성’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 금전적인 요인보다는 비금전적인 요인이 좋은 일자리를 규정하는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1> 좋은 일자리 내에서의 만족도 특성별 분포

(단위 : %)



기혼여성의 노동공급과 단시간 근로

담 당 자	황 수 경
전 화	02)784-7405
매 수	3 매

I. 여성의 시간배분과 노동공급 분석

○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결정에서 가장 큰 제약은 가사노동에의 시간배분

- 우리나라에서 기혼여성은 하루평균 4시간 30분을 가사노동에 소비하는 반면, 기혼 남성은 단 36분을 소비. 취업한 기혼여성의 경우에도 가사노동에 하루평균 3시간 21분 소비(통계청 『1999년 생활시간조사』)
- 시장노동에서는 남성은 5시간 58분, 여성은 3시간 6분을 소비
- 남성은 시장노동 중심으로, 여성은 가사노동 중심으로 시간배분이 이루어짐.
- ☞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분석은 가족 내 역할로 인한 특수한 시간배분을 고려해야 함

○ 가족주기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의 특징

-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상태는 가족주기별로 큰 차이를 보임.
- 1주기에서 기혼여성 중 취업자가 54.4%를 차지
- 육아의 부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2주기에 들어서면 25.9%로 급격하게 감소.
- 영유아 자녀가 없어지는 3주기에서 취업자 비율은 50.6%로 다시 증가

☞ 1-2주기 사이에 비전문직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이탈자가 상당수 존재

※ 가족주기의 구분

- 제 1 주기: 여성의 결혼으로 시작되어 첫 자녀가 출생하기 이전까지의 가족의 형성 단계,
- 제 2 주기: 첫 아이 출산으로 시작되어 막내자녀가 2세가 될 때까지 육아부담이 집중되는 단계,
- 제 3 주기: 막내자녀가 3살이 되는 때부터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자녀보육 단계,
- 제 4 주기: 막내자녀가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기혼여성의 보육부담이 완료되는 단계,
- 제 5 주기: 자녀의 결혼으로 새로운 가족 단위가 형성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가구가 재편되는 단계

- 기혼여성의 임금 및 근로소득은 남성과는 달리 가족주기가 올라감에 따라 감소
 - 기혼여성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 및 근로소득은 1주기에 가장 높고 주기가 올라갈 수록 감소하는 패턴을 보임
 - 남성(배우자)의 임금 및 근로소득은 3주기를 정점으로 증가하다가 4주기부터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음.
 - 기혼여성의 취업자구성에서 1-2주기와 3-4주기 사이에 단절이 있음을 시사
- ☞ 3주기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기혼여성은 우량일자리보다는 판매서비스직과 단순직을 중심으로 형성된 저숙련 비정규 고용으로 집중
- ☞ 현재의 기혼여성 노동시장구조로는 **고학력의 양질의 여성노동력을 흡인하기에는 역부족**

<표 1> 가족주기별 본인 및 배우자의 경제활동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전 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비율(%)	54.4	25.9	50.6	46.2	11.9	42.6
월평균 근로소득(만원)	125.0	121.0	110.5	93.1	79.4	101.3
평균 근로시간(/주)	48.4	49.7	49.2	53.6	55.6	52.0
실업자 비율(%)	1.3	0.2	1.7	1.2	0.0	1.1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비율(%)	89.3	93.9	93.1	71.0	34.0	80.2
월평균 근로소득(만원)	166.3	188.6	214.8	176.5	124.0	190.2
평균 근로시간(/주)	53.0	55.3	56.7	54.2	53.1	55.1
실업자 비율(%)	4.3	2.4	1.5	0.8	2.0	1.3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5차년도(2002) 자료

<표 2> 가족주기별 여성의 직업 특성 (단위: 명, %)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전 체
<직업>	(85명)	(103명)	(514명)	(1,105명)	(45명)	(1,852명)
전문직	9.4	18.5	6.4	3.1	4.4	5.2
준전문직	24.7	21.4	13.0	4.6	2.2	8.7
사무직	34.1	18.5	13.0	4.6	0.0	9.0
판매서비스직	23.5	25.2	36.2	37.2	40.0	35.7
생산직	8.2	13.6	20.0	34.3	37.8	28.1
단순노무직	0.0	2.9	11.3	16.2	15.6	13.3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5차년도(2002) 자료

Ⅲ. 단시간 근로에 대한 기혼여성의 선호

○ 경제활동 상태를 ‘풀타임 고용’-‘파트타임 고용’-‘비고용’의 세 범주로 구분하여 기혼 여성의 선호를 분석함.

- 가사부담은 풀타임 고용에 마이너스 효과

- 유배우자이거나 0-12세 자녀가 있는 경우 풀타임 고용에 마이너스 효과
- 그러나 자녀의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마이너스 효과는 점차 축소함.
- 그러나 부모와 동거하는 기혼여성의 경우 풀타임 고용확률이 높아짐. 이는 조부모의 도움으로 양육부담을 덜으므로 풀타임 고용에 머물 가능성이 높기 때문

- 그러나 가사부담과 파트타임 고용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주소득원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및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파트타임 고용에 대한 선호가 존재
- ☞ 파트타임고용이 자녀양육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 또는 소득보다는 다른 이유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의 기혼여성에게 상대적인 친화력을 갖고 있음
- ☞ 단시간 근로는 가사노동 수행이라는 현실적 제약 하에서 기혼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가정-직장 병립형 고용형태가 될 수 있음

이공계 인력의 경제적 지위 및 근래의 변화

연구자 (소속 및 직위)	류재우 (柳在雨) (국민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전화	02)910-4524
매수	4 매

I. 문제의 제기

○ 과학기술인력의 중요성

- 과학기술 인력은 과학지식의 창조, 신기술의 개발 및 생산에의 응용을 통해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임. 이들 인력의 적정한 공급 없이는 장기에 걸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 이공인력의 양성과 관련한 당면문제: 이공계 기피현상

- 근래에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양적으로는 수능의 자연계열 지원자의 절대수(1998년 43만명-> 2004년 21만명) 뿐 아니라 비율(1997년 43%->2004년 31%)이 대폭 감소하였음. 그러나 이공계 출신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마당에서 양적인 측면에서의 이공계 기피현상은 아직 커다란 문제는 아님.
- 문제는 질적인 측면에서도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임. 예체능계를 제외한 수능 1등급 학생들 중 자연계 학생의 비중은 1998년 51%에서 2004년 38%로 감소. 자연계 1등급자의 다수는 의학계 전공을 원하고 있음.

○ 이공계 기피현상의 원인

- 이공계 직종과 결부된 자부심의 소멸, 이공인력의 사회적인 발언권(voice)의 부존재, 사회적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소외, 언론을 매개로 한 전염 효과 등도 기피현상의 확산이 있게 하는 요인들임. 그러나 이들 요인은 전공선택과 관련한 단기적인 '유행'을 촉발시킬 수는 있지만 추세적인 변화를 유지시킬 수 있을 요소가 되기는 힘들다고 할 것임.

○ 본 연구의 과제

- 이공인력에 대한 대우 수준 및 그 변화에서 기피현상의 근원을 찾고자 함.
- 분석대상은 4년제 대학의 이공계를 졸업한 남자임. 이들 인력의 고용과 소득면에 있어서의 지위 및 그 변화가 이공계기피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음.

II. 분석결과

1. 고용측면의 분석

- 상용직에 있던 사람이 1년 사이에 그 일자리에서 빠져나갈 확률에 대한 분석도 하였음. 구조조정이 활발히 진행되던 1999년과 2000년 사이에 이공계 인력의 퇴출 비율이 높았었던 점이 발견되는 바, 구조조정과정에서 이공계가 집중적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일부 확인됨.
-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최근 5년 동안 이공계 출신자에 대한 고용면에서의 대우가 하락하였다는 증거는 별로 발견되지 않음.

2. 소득측면의 분석

- 대학입학생이 이공계를 선택할지 여부는 이공계 출신자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가의 여부에 중요하게 영향받을 것임. 이공계 출신자의 평균임금을 비이공계(의약계열 포함)출신자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구한 상대평균임금은 97.9%(1998), 95.4%(1999), 99.3%(2000), 94.8%(2001), 97.5% (2002)임. 즉 이공계 출신은 비이공계에 비해 0.7~5.2%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음.
- 이같은 이공 인력의 낮은 상대임금이 이공계 기피의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여짐. 반면 의약계의 상대소득 그 중에서도 특히 상대 자영소득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 현상은 의약분업의 실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공계 기피가 의학계 선호와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음을 제시함.

- 특정 전공계열 출신의 ‘대표적인 노동자(representative worker)’가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생소득도 구하였음. 이 평생소득은 연령에 따라 취업해있을 확률이나 임금부문에 남아있을 확률 등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에 넣어 계산한 것으로 한 전공출신자의 임금이나 자영소득이 높아질 때 뿐 아니라 노동시장 참가율이 높아지거나 은퇴시점이 늦어질 때도 높아지게 됨.
- 미래소득에 대해 얼마의 할인율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추정 결과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공계 출신은 음의 프리미엄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참조). 이는 상당부분 이공계의 자영소득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에 기인함.

<표 1> 이공계 출신자의 상대 평생소득

	(0% 할인율 적용)	(10% 할인율 적용)
1998	.90	.92
1999	.99	1.02
2000	.93	.99
2001	.80	.99
2002	.93	1.04

III. 결과의 해석

- 이공계 직종의 경우 현장성, 높은 노동 강도, 경직적인 근로조건이 요구되며,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직무에서의 쾌적성도 낮은 등 여러 면에서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음. 이들 요인들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이 주어질 때에만 이공 분야로의 인력의 적정한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공학기술자는 소득 면에서 미국에 비해 매우 낮은 대우를 받고 있음은 본인의 이전 연구에 의해 이미 밝혀졌음. 본 연구에서는 근래에 이공인력의 경제적 지위에 있어서 상방으로의 의미있는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즉 이공인력은 임금수준이나 평생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바, 이 현실이 개선되고 있지 않음. 이같은 상황에서는 기업이 이공계 기피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모순적임.

- 요컨대 이공계 기피의 경제적 원인은 이공계 인력의 경제적 지위에 있어서의 변화가 아니라 **이공계가 대우받지 못하는 현실이 변화하지 않았다는 데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임.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이공계 직종의 불리한 조건에 대해 요구되는 보상이 커져온 데 반해 이공직종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은 것이 이공계 기피의 기본적인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 이공인력의 상대소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생산성이 높아져야 할 것임. 수요측에서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 공급측에서는 현장성 강화를 포함하는 이공계 교육의 혁신 등의 노력이 행해져야 할 것임.
- 또한 이공계를 대우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정치적·제도적 요인 -예컨대 경직적인 호봉제에 기초한 보상 시스템, 형평성 논리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노동조합, 비이공계 인력에 의한 조직 내의 의사 결정권 독점- 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은퇴 결정과 은퇴 전·후 소비의 상호작용

담 당 자	안중범·전승훈
전 화	02)760-0435
매 수	3 매

I. 조기은퇴가 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필요

- 외환위기 이후 특히 최근에는 조기은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명예퇴직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으며, 특히 최근에는 사오정(45세 정년), 오육도(56세까지 일자리에 있으면 도둑)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음.
 - 이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를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임.
- 조기은퇴는 소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조기은퇴를 결정하게 되면, 은퇴 기간이 길어질 것에 대비하여 보다 많이 저축하면서 은퇴 전 소비를 줄이게 되고, 은퇴기간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 소비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큼.
 - 개인의 효용이 소비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때 소비의 감소는 효용의 감소로 이어지게 됨.
-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조기) 은퇴 결정행위와 소비결정 각각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은퇴 결정행위와 소비결정이라는 두 가지 결정을 동시에 고려하여 은퇴결정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움.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은퇴 결정과 소비결정(은퇴 전·후 소비)이라는 두 가지 결정을 동시에 고려하는 모형을 기초로 한국과 미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

II. 은퇴 결정이 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의 「한국노동패널」과 미국의 Health and Retirement Study(HRS)를 이용하여, 다양한 경제적·비경제적 요인과 함께 정규은퇴 시점보다 앞서 은퇴하는 조기은퇴 행위와 정규은퇴 시점 혹은 그 보다 늦은 시점에 은퇴하는 지연은퇴 행위가 은퇴 전·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이단계변환회귀분석(2-Stage Switching Regression)으로 분석함.

- 은퇴결정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결과
 -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한국의 경우, 조기은퇴결정이 은퇴선후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으나
 - Health and Retirement Study를 이용하여 분석한 미국의 경우에는, 조기은퇴가 은퇴전후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
 - ⇒ 조기은퇴자는 은퇴 전·후 소비를 줄이고, 지연은퇴자는 은퇴 전·후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은퇴결정에 따른 소비의 소득탄력성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결과
 - 한국의 경우 소득이 증가하였을 때 조기은퇴자의 소비증가폭이 지연은퇴자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남.
 - ⇒ 소득 100원 증가 시 조기은퇴자는 은퇴 전에는 35원을 은퇴 후에는 30원만을 소비하는 반면, 지연은퇴자는 은퇴 전에는 63원을 은퇴 후에는 42원을 소비한다는 의미임.
 - ⇒ 이는 조기은퇴 결정이후 상대적으로 길어진 은퇴기간에 대비하기 위해 지연은퇴자 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소비하게 됨을 의미.
 - 미국의 경우 역시, 소비의 소득탄력성 비교결과에서는 조기은퇴자의 소비증가폭이 지연은퇴자의 소비증가폭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남.

○ 두 가지 정책적 시사점

- 첫째, 조기은퇴는 고령자의 소비 및 후생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음.

⇒ 조기은퇴를 줄이기 위해 고령자 노동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정책방안이 마련될 필요

- 둘째, 은퇴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될 필요가 있음.

⇒ HRS를 이용한 분석에서 지연은퇴자의 경우 은퇴 결정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은퇴 전·후 소비가 증가함.

⇒ 이는 언제 은퇴하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개인이 스스로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

⇒ 즉 고령층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정책방안이 마련될 필요.

소득계층별, 종사상지위별 가계부채에 관한 연구

담 당 자	김학주
전 화	055)751-6636
Email	lionking@nongae.gsnu.ac.kr
매 수	3 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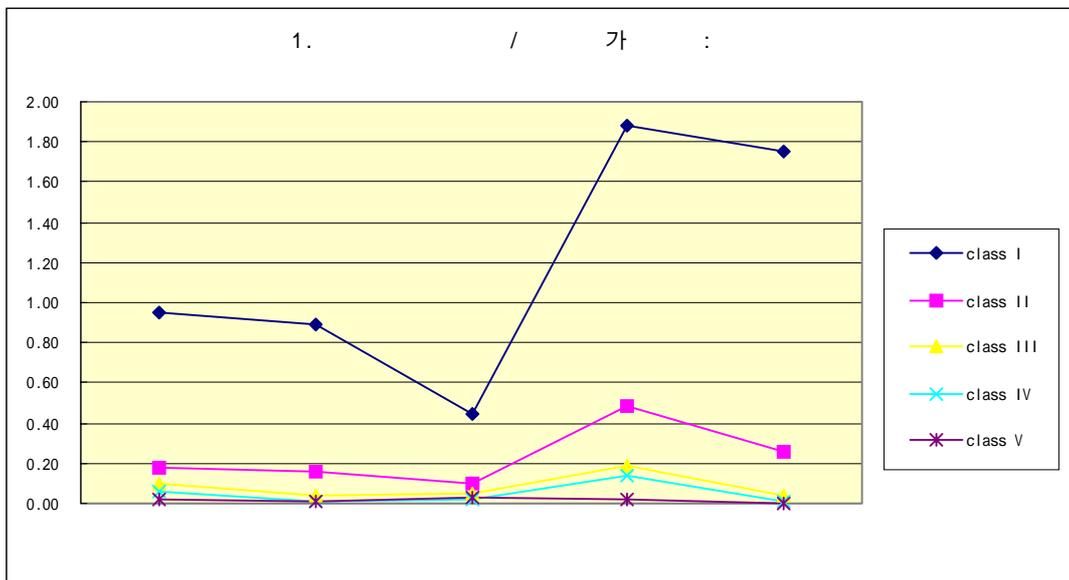
1.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실태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계부채는 두 배로 늘어날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거듭하였고 2003년 3분기 현재 한 가구당 3138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실정(한국은행, 2003). 이처럼, 가계부채가 급증한 이유로는 내수중심의 경기부양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소비자 신용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한 영향이 적지 않음.

2. 선행연구

- 1) 외국의 경우, DeVancy (1994), Canner et al(1991), Malowe & Godwin (1988), 그리고 Hira(1990)의 연구들은 소득, 가구주 성별, 연령 교육수준, 주택보유여부, 가구원수, 신용에 대한 태도, 취업여부, 부채원의 수 등이 가계의 부채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음.
- 2) 성영애(1996)는 도시근로자가계의 부채부담추이에 대한 연구에서 대학졸업자 가계, 봉급자 가계의 부채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고.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채부담이 높았고 단순노무자가계에 비해 전문기술직, 사무직종사자 가계의 부채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문숙재, 김순미, 양정선(1996)의 연구에서는 저학력자와 비정규직, 미취업자는 부채보유 확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총부채액에 있어서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총부채액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성영애·최현자(2000)는 유형별 부채의 보유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교육수준은 은행부채 보유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3. 본 연구에서는 소득분위를 극빈층, 차상위층, 저소득층, 중간층, 그리고 고소득층으로 나누어 부채보유실태를 분석함. 또한 총 수입에서 소비/비소비지출을 차감한 가계수지가 음(-)의 값을 가질 경우 적자가구로, 그렇지 않을 경우 비적자가구로 각각 분류하여 두 집단간 수입과 소비지출의 구성내역에서 적자의 원인을 파악하였음- 그 결과 가계부채규모와 수지에 있어 소득계층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4. 경제적으로 어려운 최저생계비 대비 200% 이하계층의 경우, 연도별 추이를 고려할 때 가계수지 적자가구의 비율이 높은 추세에 있음.

- 1998년 약 49%의 극빈층이 적자가구에 해당되었으나 2001년에는 65%, 2002년에는 63%로 늘어나고 있으며 차상위층에서도 14.99%에서 20.38%로 가계수지 적자가구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세를 보임으로서 심화하는 빈곤계층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반증하고 있음.
- 반면에 최저생계비 대비 400% 이상 상위계층의 가계수지에 있어서는 적자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800%이상 계층에서는 2002년도 현재 적자가구에 속하는 표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5.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를 기준으로 할 때 **상용직보다는 임시직, 일용직 또는 자영업의 경우에 있어 적자가구가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러한 경향은 최근 5년간의 연도별 추이에서도 확인되었음.

- 1998년의 경우 미취업가구주를 둔 가계의 부채부담율이 0.91로서 정규직(상용직) 근로자 가구에 비해 약 5배에 달하는 지불부담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이처럼 사회적으로 구조적 실업이 완화되지 않은 가운데 가계부채가 급증하게 되면 상환능력을 상실한 신용불량자는 양산될 수밖에 없음 (특히 신용카드업 관련 가계신용의 급격한 증대는 무담보부 가계부채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됨).

6. 한편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단순한 근로소득의 격차뿐만 아니라 가계에 지급되는 사회보험급여와 정부보조금의 상대적 비중이 적자가구와 비적자가구간의 소득의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가계수지에 있어 적자의 원인은 소득이 불충분한 것 이외에 과도한 교육비 지출경향에 있는 것이 확인됨.**

- 각 소득계층별로 분석해 본 결과 적자가구와 비적자가구간 소득의 격차보다 공·사 교육비 항목소비의 격차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확인. 소비구성에 있어서는 기타 세부 소비항목들에서 적자가구가 비적자가구보다 절대액 기준으로 소비규모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미취학자녀의 사교육 이용여부 및 비용의 결정요인

담당자	김지경 책임연구원
전화	02)3775-0674 02)782-0141(326)
매수	4 매

-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 사교육문제를 거론함에 있어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미취학자녀의 사교육을 조명함으로써, 사교육의 문제가 학령기 이후에 불거지는 문제가 아닌 취학 전부터 시작되어 학령기가 끝나는 시기까지 장기간 연이어지는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하려는 노력이 우리사회에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였음.
- 사교육에 관한 논의에서 미취학자녀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은 이유는 ①사교육의 문제가 입시제도를 중심으로 한 문제로 귀결되었고, ② 취학 전 사교육이 보육과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려워 성격규명조차 없었으며, ③ 사교육과 관련된 각계의 조사자료들과 실증연구들이 초·중·고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미취학자녀의 사교육이용 및 지출비용에 대해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가 없었음.
- 사교육의 문제는 공교육에 접어든 연령을 시발점으로 하여 불거지는 문제가 아니며 그 이전에 이미 상당부분 시작되고 있음.
- 사교육의 문제를 연령에 따라 단절된 형태가 아닌 생애주기와 함께 연이어지는 즉 영유아기부터 학령기를 마치는 시기까지 대략 20년 정도 이어지는 장기적인 문제로 보아야함.
-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기 이전시점에서부터 사교육의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미취학자녀들이 이용하는 사교육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며, 영아기와 유아기 자녀들의 사교육이용 및 지출비용을 결정하는 요인을 밝혀내고자 함.
- 분석대상은 한국노동패널 5차년도(2002)에 조사된 7세 이하 미취학자녀 895명이며,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제외한 사교육종류(학원, 개인/그룹과외교습, 학습지, 방과후교실(사회복지관 등에서의 특기지도 및 학습))의 이용을 ‘사교육이용’으로, 이들 사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을 ‘사교육비’로 정의하였음.

- 분석 결과 미취학자녀가 사교육을 이용하는 비율은 35.1%이고, 사교육이용 자녀 중 사교육만을 이용하는 자녀는 64.6%이고, 유치원이나 보육시설과 함께 사교육을 이용하는 자녀는 35.4%로 나타나 적지 않은 비율의 미취학 자녀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이외 별도의 사교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음.

<표1> 자녀연령별 사교육기관 이용자 유형구분

(단위: n, %, %)

연령 \ 유형	사교육만 이용자	사교육+(유치원/보육시설) 이용자	계
0-2세	11(78.6/4.8)	3(21.4/2.7)	14(100.0/4.5)
3-5세	125(61.6/61.5)	78(38.4/70.3)	203(100.0/64.5)
6-7세	67(69.1/37.7)	30(30.9/27.0)	97(100.0/31.0)
전체	203(/100.0)	111(/100.0)	314(/100.0)

- 사교육을 이용하는 미취학자녀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12만8천원이고, 사교육만 이용하는 자녀의 경우가 월평균 14만8천원을 지출하여 유치원이나 보육시설과 함께 사교육을 이용하는 자녀의 경우보다 5만6천원 가량 더 많이 지출함. 이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서 일정부분 특기 및 재능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임.
-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2세 자녀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사교육만을 이용하는 6-7세 자녀의 사교육비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난 결과는 최근 고가(高價)의 놀이지도와 같은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는 현실을 염두 해 볼 때, 그 사례는 많지 않으나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재능 및 특기교육 이외에도 영유아기의 어린 자녀가 상당비용을 지출하는 추가적인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2> 자녀연령별 이용 유형별 월평균 사교육비

(전체 N=314, 단위: 만원)

연령 \ 유형	0-2세	3-5세	6-7세	유형별 전체 사교육비
사교육만 이용자	10.0	13.9	17.4	14.8
사교육+(유치원/보육시설) 이용자	21.3	8.0	11.0	9.2
연령별 전체 사교육비	12.4	11.6	15.4	12.8

- 사교육만을 이용하는 자녀들의 경우는 ‘학원’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을 이용하는 반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과 함께 사교육을 이용하는 자녀들은 ‘학습지’를 중심으로 한 사교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학원만을 이용하는 자녀의 경우 학원에서 일정부분 보육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 유치원이나 보육시설과 함께 이용하는 사교육이 학습지라면 이 경우는 ‘보육’이 아닌 추가적인 ‘학습’을 위하여 사교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 됨.
 - 이처럼 미취학자녀가 이용하는 사교육의 성격은 사교육을 유치원이나 보육시설과 더불어 이용하는지의 여부와 이용하는 사교육종류에 따라서 상이함을 알 수 있음.

<표3> 자녀연령별 이용하는 사교육 종류

(전체 N=314, 단위: n, %)

유형	종류		학원	과외	학습지	방과후 교실	무응답	계
	연령							
사교육만 이용자 (n=203)	0-2세		4(36.4)	-	7(63.6)	-	-	11(100.0)
	3-5세		93(74.4)	2(1.6)	26(20.8)	1(0.8)	3(2.4)	125(100.0)
	6-7세		55(85.9)	5(7.8)	4(1.6)	-	3(4.7)	64(100.0)
사교육+(유치 원/보육시설) 이용자 (n=111)	0-2세		1(33.3)	-	2(66.7)	-	-	3(100.0)
	3-5세		21(26.9)	4(5.1)	52(66.7)	1(1.3)	-	78(100.0)
	6-7세		16(53.3)	2(6.7)	10(33.3)	2(6.7)	-	30(100.0)

- 미취학자녀의 사교육이용여부 및 지출비용을 결정하는 요인의 분석결과 사교육이 용여부에 있어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이용할 가능성이 낮고 6세 이상의 자녀가 이용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자녀의 보육에 있어서는 사적인 차원에서 가족이나 친지를 중심으로 한 형태가 선호되고 교육에 있어서는 정규교육기관으로서의 유치원에 대한 이용이 선호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미취학자녀들이 이용하는 사교육은 우선 선택되는 보육 및 교육형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미취학자녀의 사교육이용이 선호되는 선택에 의한 결과가 아니며 입시경쟁을 중심으로 한 고액의 과외형태가 아닐지라도 사교육비용에 있어서는 6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와 소득이 높은 가구의 자녀들이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밝혀졌음.

- 이는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할 수 있는 부모의 자녀들이 사교육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단 사교육을 이용하는 자녀에 있어서는 그것이 보육이든 교육이든 학령기 이전부터 불평등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음.
- 연령별로 나누어 사교육이용여부 및 지출비용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3-5세의 경우는 가구소득을 비롯한 어머니의 취업과 비핵가족형태 등이 결정요인으로 밝혀진 반면, 6-7세의 경우는 서울지역의 거주나 가구소득과 같은 학령기 자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다른 선행연구결과와 동일한 변수들이 결정요인으로 밝혀졌음.
- 이는 3-5세 영아들이 이용하는 사교육은 ‘보육’의 성격이 강하며, 6-7세 자녀들이 이용하는 사교육은 ‘교육’의 성격이 강한 것을 의미함.
- 따라서 미취학자녀의 사교육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영아의 경우는 보육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유아의 경우는 취학 전 예비학습의 측면에서 이해하여 연령에 따라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